

The Reunified Korean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5. 9 통권 제9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권 두 언 / 통일 원칙과 남북한 경험 / 이상우 2

특별 기획

독일 한스베르너 진 교수와의 대담 : 독일 통일의 교훈 / 김창권 4

이달의 초점

너그러운 정부와 강경한 국민 / 표완수 15

시사특집

김정일 정권의 출범과 한반도 정세 변화

- 김정일의 권력 승계 지연과 향후 과제 / 제임스 컷튼 20
- 김정일의 권력 승계와 정책 전망 / 이태섭 23
-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의 남북 관계 전망 / 박영호 35
- 김정일 체제의 대외 관계 전망 / 김계동 42

현안

북한 외자 유치의 한계와 전망 / 임윤출 51

연구논단

- 북한법·통일법 연구의 성찰과 과제 / 장명봉 58
- 통일의 사회적 문제와 사회 계획 / 이각범 67
- 고전적 통합 이론의 남북한 적용 가능성 / 김영운 74

내가 겪은 북한

짓밟히는 자존심 / 김대호 88

인물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3) / 유영구 92

통일다리

북한의 언어 생활 이해 / 정석홍 101

통일 원칙과 남북한 경험

이상우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벽돌을 한 장씩 쌓아 가면 집이 된다. 그러나 설계도에 따라 쌓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벽돌을 마구 쌓아도 집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설계도 없이 쌓은 벽돌은 벽돌 무더기가 되어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작 집을 지을 때 치우지 않으면 안되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되고 만다.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정책에 맞추어 경험을 해 나갈 때만 통일 촉진 사업이 되지 마구잡이로 경험을 할 때는 오히려 통일 과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하나의 '민주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한반도에 사는 7천만 동포 모두가 자유를 누리며 고른 복지를 보장받고 동등한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통일 과업이다.

이러한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 원칙을 세워 놓고 모든 노력을 이에 맞추어 가고 있다.

첫째는 평화 통일 원칙이다. 우리는 통일을 무력으로 이루려 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 하는 것을 억지하고 있다. 우리의 부력 불사용과 북한의 부력 불허용이 우리의 첫번째 원칙의 핵심이다. 이 나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국론을 반영한 것이 이 원칙이다.

둘째는 현실 존중 원칙이다. 분단 극복이 우리의 목표이지만 분단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는 분단 극복의 길이 열릴 수 없다는 인식에서 일단 북한을 현실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북한 정권 당국과 협상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우리는 북한 정권을 '책임 있는 협상 대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북한에게도 우리 정부를 협상 대표로 받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는 실질 우선 원칙이다. 실속 없는 형식적 합의보다는 실질적으로 통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부터 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 두 개의 나라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가공적 통일 모양을 갖춘 통일 정부를 세우자는 북한측의 요구에 우리가 냉담한 것은 우리의 이런 생각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는 짧고 민족은 영원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북한 동포가 우리와 같은 삶을 누림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민족 통일을 정치 통일에 우선시키고 있다.

넷째는 자주 통일 원칙이다. 분단은 외세에 의해 당했지만 통일만은 우리 손으로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의 결의이다. 남의 도움으로 얻은 해방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심리적, 정치적 부담으로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교훈 삼아 우리는 통일 과업만은 우리 손으로 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대체로 정리해 본 우리의 네 가지 통일 정책 기조와 추진 원칙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경협은 어떤 지침에 따라 밀고 가야 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첫째로 경협은堂堂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정부간에 경협 방법을 합의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경협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 정권의 통일 의지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다소 손해 보는 비대칭적 교역이

나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에서 양보하는 지 밝히고 해야 한다.

둘째로 북한 정권이 약속을 지키도록 다짐하고 확인한 후 북한에 지원성 협력을 해야 한다. 동포에게 혜택을 주려는 우리의 지원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다든지 할 때는 이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한 지원은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로 경협은 통일 정책 기본 원칙에 부합할 때만 행하여야 한다. 북한이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하려는 분명한 의사를 보일 때, 그리고 북한 정권 당국이 우리 정부에 명시적으로 요청할 때에 한해서 실시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의 무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남북한간의 경협은 일반 상거래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통일 정책 전개 수단이다. ‘정경 분리’라는 명목을 내걸고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협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은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 나라의 일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과의 경협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통일 정책에 대한 기여도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경협은 통일 대계라는 설계도에 따라 벽돌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펼쳐 나갈 때라야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